생활 · 공업용수 수요 관리 종합계획 마련

– '물 부족 대비' 용역 최종보고회 …대체용수 개발 등 제시

2015년 충남도내 생활 · 공업용수 부족 사태에 대비한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이 나왔다.

물 수요 관리 강화를 위한 상수도 누수 절감 및 요금 현실화, 하폐수 재이용, 대체용수 개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12월 5일 도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구본충 행정부지사와 도내 16개 시 · 군 상수도 업무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내 생활 공업용수는 ▲지방상수도 시설용량 감소 및 광역 시설용량 부족 ▲보령댐 계통 시 · 군 용수 부족 ▲광역 충남서부권 등 각종 신규개발 난항 등으로 2015년부터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1일 생활용수 여유량 60만5천㎥과 공업용수 의 생활용수는 2015년 1만5천㎥ 부족으로 돌아서고, 공업용수는 현재 22만㎥가량 여유가 있지만 2015년에는 1일 55만2천㎥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년에는 생활용수가 1일 24만1천㎥, 공업용수는 76만7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 상수도 수급은 시 · 군별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배분계획 재조정 및 신규 수급을 통해 해결하고 ▲생활용수는 광역상수도 우선 분배 ▲공업용수는 각 공단 공장별 중수도 설치 유도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상수도 누수 절감 및 유수 수량 증대를 위해 ▲2천270㎞의 노후 관로를 교체하고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666㎞ 신설 확충 ▲수도계량기 교체 15만2천개 누수 탐사 등을 실시한다.

절수기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0만개씩 보급한다. 대체용수 개발을 위해서는 중수도 확대 설치, 신설 관공서 및 학교 빗물 이용시설 설치, 하폐수 재이용시설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1인당 물 사용량은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요금은 낮은 만큼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총 소요 사업비는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764억원(유수율 제고 8천900억원 포함)으로, ▲중수도 보급 54억원 ▲절수기기 보급 16억8천만원 ▲빗물 이용시설 92억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에 169억1천만원 등을 투입한다.

충남도, 행정혁신 본격 돌입

–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 계획" 발표

충남도는 21세기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최고의 자치정부 구현"을 위한 충

남형 행정혁신 모델을 정립하고, 행정혁신 추진 체계 구축과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내용으로 하는 "충남형 행정혁신" 추진 계획을 12월 1일 발표했다.

행정혁신 추진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충남형 행정혁신 모델"을 정립, 일 잘하는 지방정부, 존경과 신뢰받는 공직상 정립과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추진 전략으로는 ▲공무원의 지식 전문 창의성을 업무에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자기주도적 행정' ▲정책 당사자와 전문가, 이익집단, 도민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 행정' ▲부서간 칸막이 제거 등 종합 통합적 업무 처리로 효과를 거두는 '융·복합 코디네이션 행정' 등을 제시했다.

추진단계로 민선5기를 3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10. 7~'11. 12)는 도입 조성기로 혁신업무 실천을 위한 모델을 정립 등, 2단계('12. 1~'12. 12)는 실행 및 확산기로 분야별 혁신과제 발굴 및 실행, 3단계('13. 1~'14. 6)는 혁신문화 정착기로 혁신과제 평가·환류를 통해 성과 창출을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두번째로, 행정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충남행정혁신위원회 설치 ▲혁신관리담당관 기능 강화 ▲행정혁신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을 내용으로 행정혁신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민·관 협력체인 충남행정혁신위원회는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혁신과제의 발굴 및 채택 등 심의와 혁신정책 자문으로 혁신과제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혁신실적 성과를 인사 및 보상체계와 연계하여 직무성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혁신 친화적 조직을 정립하고 유동정원제 운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 대처하는 등 실적과 능력 중심의 발탁 승진 제도 활성화 등 기존 행정행태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번째로는, 충남형 행정혁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직원모임 등을 활용한 교육 및 사례 발표 ▲이행력 담보를 위한 '혁신 계약제' 실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혁신 제안함' 설치 ▲민간 주도형 '충남형 혁신포럼' 출범 및 지원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 2012년형 수학여행 프로그램 내놔

- 4개 분야 9개 모델코스, 생태체험 추가, 홍보책자 제작 추진 -

"2012년 수학여행은 갯벌, 생태, 역사, 국악체험이 가능한 충남으로 오세유~ 체험학습 위주의 4개 분야 9개 모델 수학여행 코스 좋아유~"

충남도는 기존의 수학여행 프로그램에 해안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코스를 추가한 2012년형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코스를 개발했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수학여행 코스는 지난 8월 26일 서울시교육청과 소규모·테마형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현장체험학습과 연계한 역

사 · 문화 · 생태 · 국악체험 위주로 개발했다.

특히, 직접 몸으로 체험하려는 관광 트랜드 변화에 발맞추어 태안의 만대마을, 볏가리마을, 별주부마을 등에서 어촌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 코스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이번에 개발한 수학여행 코스를 책자에 담아 홍보할 계획인데, 기존의 홍보물과는 달리 기행문 형식으로 충남의 관광지를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숙박시설, 맛집, 여행 팁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담을 생각이다.

이번에 제작하는 홍보책자는 서울시 및 각 시 · 도 교육청 등에 배포해 내년 봄, 가을 수학여행 최적지가 충남임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한, 도는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수학여행 모델코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가는 한편, 수학여행 관계자 팸투어를 추진하고, 수학여행단에게 제공할 홍보용 팸플릿도 별도로 제작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백제역사 · 문화, 해양, 생태, 갯벌 등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개발한 관광코스가 수학여행단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학여행 코스를 지속적으로 보완 ·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홍보책자와 다르게 충남의 관광지를 재미있는 기행문 형식으로 꾸미고 숙박시설, 맛집, 여행 팁 등을 담은 홍보책자도 수학여행단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농혁신, 대한민국의 뿌리 살리자는 것"

– 안희정 지사, 11월 28일 한농연 한여농 도 임원과 간담회 가져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1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농연 및 한여농 도 및 시군 회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3농혁신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내 농민단체 임원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한농연과 한여농 도 임원과 시군회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농혁신 설명과 간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3농혁신 설명은 충청남도농어업 · 농어촌혁신위원회 허승욱 위원장이 그동안 추진해 온 경위와 11개분야 347개 과제에 대한 설명을 맡았으며 안희정 지사는 모두발언과 간담을 직접 주재하면서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개진되는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하는 자세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는 "우리의 뿌리인 농촌의 미래 없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

기 때문에 3농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3농혁신은 기존 농업정책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것으로, 이는 농업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와 산업, 경제, 마을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융·복합된 과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이어 "농업은 농촌을 살릴 수 없지만, 농촌은 농업을 살릴 수 있다"며 농촌을 농업인의 공간이 아닌 도시민과 함께 공유해가는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인식과 "친환경 급식 등 지역 소비자와 순환식품체계 형성, 유통망과 공급망 개선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충남도, '12년 국·도 비지원 축제 선정 심사

- 문화관광축제 추천 대상 7개, 도비 지원 향토문화축제 순위 결정

충남도는 11월 22일, 제3차 축제육성위원회(위원장 박웅진)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선정하는 2012년 문화관광축제 후보로 7개 축제를 추천키로 했다.

내용을 보면, 올해의 기존 4개 문화관광축제로 당연 추천 대상인 ▲천안 흥타령춤축제 ▲금산 인삼축제 ▲강경 발효젓갈축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예산 옛이야기축제 ▲부여 서동연꽃축제 ▲홍성 내포문화제가 이번 심의에서 우선 순위에 의해 추가되었다.

아울러, 도는 내년 도비를 지원할 향토문화축제를 선정하기 위해, 위 7개 추천 축제 외에 나머지 12개에 대하여 평가 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했다. 또한 단독으로 응모한 청양 칠갑문화축제는 통·폐합 지원 축제로 결정했다.

심사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공모를 거쳐 시장·군수 등이 추천한 축제 가운데, 기존 문화관광축제를 제외하고 제안 설명과 서류 심사를 통해 비공개 일괄 평가를 실시하여 공정성을 지켰다. 특히 이번 심사는, 충남도의 기본 방침인 '민간 주도·자립형' 축제 육성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주민 참여도와 자립도에 큰 비중을 두어 평가함으로써 앞으로 지역축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문화관광축제는 12월 중순 경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결과에 따라 도비 지원 향토문화축제는 중앙 탈락 축제를 포함하여 이미 정해진 순위에 따라 저절로 결정이 된다. 등급별로 ▲최우수 1개 ▲우수 1개 ▲유망 1개 ▲예비 등 모두 7~8개 정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지원액이 정해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축제 심의는 새로운 채점표에 따라 평가를 하여 해당 시·군에서 제안 설명에 열의를 보이는 등 관심이 매우 컸다."며 "앞으로도 道 대표축제는 민간·자립형을 지향하는 축제가 선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중인 일몰제에 준하는 가칭 휴면기를 도입하려던 방침은 내적 동력이 확보될 때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위원들의 대다수 의견으로 도입하지 않고, 현행 지원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